

안행위 야, 국정원수사 축소·은폐 의혹 날선 추궁 산업위 골목상권 보호·동반성장 노력 '미흡' 질타

국감 현장

국회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인 15일에도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정책 실패 등을 추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골목상권 보호, 철도민영화 등을 놓고 정부를 압박했다.

◇**안행위**=이날 경찰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재차 날선 추궁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근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수사 기밀인 검찰 지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한 경찰 측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수사 기밀서류가 누출된 지 한 달여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경찰청은 해당 기밀서류의 제목조차 알내지 못했다”며 “이는 김 전 청장이 스스로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형법 제127조에 따라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김 전 서울청장 변호인이 암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가 청탁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은 문건 유출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한 상태여서 감찰이 어렵다고 한다”며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려고 내부 문서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감찰이 어려우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위**=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기업과 정부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대형마트·드럭 스토어·다이소·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 터에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없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례로 “일본계 SSM이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가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3000㎡ 이하로만 운영해 출점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형 마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 902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다이소의 경우에도 “동네 슈퍼마켓의 주수입원인 식료품 판매를 늘리고 있어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용판, 국감증인 선서 또 거부

서를 하는 동안 선서거부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김용판(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은희(가운데)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거부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저지했으나 실제 해당 시장에는 외국계 대기업의 진출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재생타이어, 조명기구 시장 등의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연평균 22개 기관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이 공공 구매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건수만 지난 3년간 191건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 운영 법인 설립 등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토부의 용역보고서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 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 대안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속도에 따른 요금증정제를 도입하고 1~2등급 열차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해놓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유곡하고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철도정책 전반을 국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과 부족 인원 외주화를 제시했다면서 안전위험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위**=방위부 국감에서는 각종 병역 회피를 위해 동원된 수법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빌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

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011년 이후 지난 7월말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나 훈련소 미입소 등에 따른 병역 기피자가 290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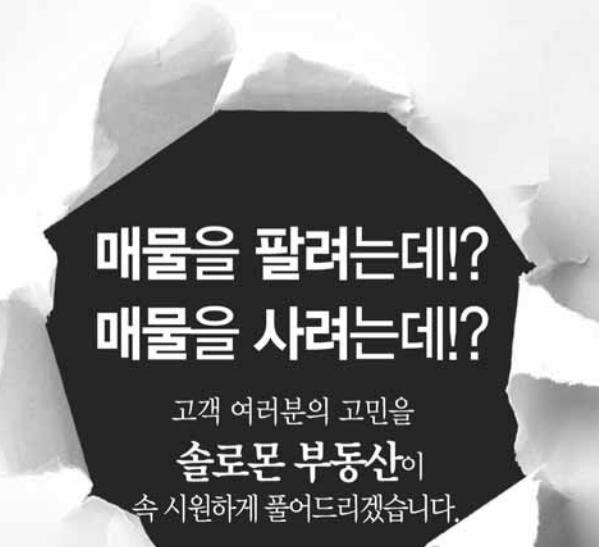
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고아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를 받은 경우가 93.8%(18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시설에 들어갈 경우 부모나 부양가족이 없는 것과 달리 경제적 사유로 인해 등록했다가 퇴원 후 가족과 다시 살기 때문에 병역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는 모두 1만820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556명이 군미필 상태에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 진행 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원료
-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원료(각종 세금 납부원료)
- 4. 각 필지별 6m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010-5166-0013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만 오피스텔, 상가기별적합 9억6천

• 협평군 영업 절차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땅에는 소형APT나 다세대 적합 10억5천

• 월풀·다세대적합지 북동상지 64평 매도1억6천

• 개발동 구호텔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원·한의원·시عا운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 상지역지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 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등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 청약만원 예상수 대지3500㎡(105)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상황에 적합. 범인정39억

• 대인동 소방도로 상지역지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대인동 소방도로 상지역지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대인동 청약만원 예상수 대출9억 임대수익상황에 적합. 범인정39억

• 대인동